

무차별적 규제완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장 임 원

지난 1년여 동안 전 사회분야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조치가 붓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영역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기준 및 의무고용이 완화되고 안전담당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산재다발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요건이 완화되었다. 이 밖에도 사업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건강진단 보고제도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아예 폐지하고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부응하는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산업안전과를 없애는 대신 축소된 산업안전지도감독의 기능을 근로감독과에 이관하였다.

이같은 대폭적 규제완화조치의 명분을 굳이 찾자면 이른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지향하는 노동의 유연성확보에서 연유한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좁혀진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구촌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의 엄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또한 현실이다. 우리는 이미 자본과 시장의 세계화에 노출되어 있고 세계속의 국가경쟁력강화가 곧 생존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국제경쟁력은 지상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규제완화의 조치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완화의 조치가 던지는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느냐, 좀 더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에 대한 문제이다.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세세한 속 내용들의 하나하나에 매달린 나머지,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허다한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세세한 속 내용들을 개별화하여 뜯어 살피는 분석력이 필요하나, 이에 못지 않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 또한 동시에 요구된다. 온갖 사물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규제 또한 그러하고 누구에겐 득이 되는가 하면 다른 누구에겐 해가 된다.

쏟아지는 규제완화의 조치를 목도하면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한다는 감회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규제는 악이고 그 완화는 선이라는 흑백논리적 인식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규제이든 사실은 제 각기 명분을 갖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산업안전보건영역의 폐기된 규제들 역시 하나같이 나름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기 처분되려면 보다 큰 명분 다시 말해 적어도 경쟁력강화의 효력이 예측되어야 한다.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어서는 안된다.

생산력은 양질의 노동력에서 나오고 양질의 노동력은 안전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안전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생산력이 나온다고 결론을 지어도 전혀 틀린 논리가 아니다. 아마도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긴다는 빌미쯤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안전한 노동환경의 보장은 역시 말 그대로의 빌미일 뿐이라는 확신을 갖게한다. 악화된 기업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역의 논리가 제시될 수도 있다. 즉 기업환경이 나쁘니까 우선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투자비용이라도 줄여야 하며, 그것이 시장경제논리라고 우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주장이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는 식의 단견이며 경계해야 할 정의롭지 못한 시장경제논리다.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은 신자유주의의 바닥에 깔린 전통적 민족주의와 불평등의 수용 및 경제적 개인주의를 함께 고려할 때 노동자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자본의 유연하면서도 무자비한 전략일 뿐임은 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삶의 문제에 좀 더 고민하는 유럽의 제3의 길(the third way)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규제의 완화는 인간의 본질적 삶의 문제에 기반하여 선별되어야 한다. 규제완화가 곧 개혁은 아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필요한 규제의 철저한 수행을 위한 장치와 조건의 강화가 개혁이다. 누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느냐의 게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참으로 절실하다.